

데스크 시각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돌이켜야 하는



김 일 환 편집부국장

지난 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트라우마 전문가 정혜신 대표는 말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4월 16일에 시간이 멈춰져 있다고, 하루 또 하루 그날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또 우리와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듬어주라...

망한 것이었나를 똑똑히 보았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매일매일 증계되는 통곡과 비극은 온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겨졌다.

망각병은 국민병인가

그리고 국민은 분노했다. 배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 실질적인 배의 주인인 유병언 회장과 그의 일가족, 재난배우일은 뒷전인 채 구조에 안이했던 해양경찰 그리고 재난 관련 부처의 무능함까지 단죄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 카드도 꺼냈다. 여야는 선원법, 해운법, 해사 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 구조법 등의 개정안인 '세월호 특별법'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대형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나 개인에 재산을 몰수한다는 유병언법 등을 발의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당장 실질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으나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없다. 그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여타의 이슈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나...

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기억상실증' 또한 깊어졌다. 안전 매뉴얼은 다시 서랍 속의 물건이 됐고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안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4월 16일에 머물러 고장 난 채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의 예만 들어도 그렇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에 이어 잇단 교통사고와 담양 펜션 화재까지 대형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또 그때마다 안전을 외쳤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재래시장은 여전히 부실한 소방장비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연안 여객선은 화물을 부실하게 결박한 채 운항 중이다. 서남해안을 운항하는 유람선은 구명동의를 묶어 놓은 채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형식적인 감독으로 눈을 감고 있다. 사고만 나지 않았을 뿐 안전의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 '세월호'로 돌아가자

언제부터 인가 우리 사회의 망각병은 거의 불치병수준이 되어버렸다. 버릇처럼 회피하고 쉽게 지워버리려는 악습이 깊게 뿌리내려있다. 가히 국민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터지면 그때뿐이고 시간과 공을 들여

제대로 하기보다는 대중 열버무려 하겠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런 망각병이 또 다른 대형사고의 주범임에도 여전히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년을 목전에 둔 지금 다시 '세월호'로 돌아가야 한다. 진도 앞바다 바다 밑 그 참담한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한다. 세월호에 댔던 295명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9명은 저 바다 밑에 있다. 그들의 아우성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국가가, 우리 사회가, 국민 개개인이 다시 한 번 특별한 자기반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우리의 치부가 무엇이었던지 과감히 드러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철학과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개조운동을 펼쳐보자는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의 골든타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2015년, 아니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도 우리는 불안의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kih8@kwangju.co.kr

社說

졸업 앞둔 중3 교실 '시간 때우기' 안 된다

수능을 마친 고3 교실에 이어 이제는 학기말고사를 마친 중3 교실도 잠을 자거나 학원숙제 하는 곳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매년 이와 비슷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그나마 기간도 한 달이러니 정상교육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중3 교실의 경우 이미 지난 달 말이나 이달 초 일제히 기말고사를 치르고 교과 진도를 마쳐 사실상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 대신 자습을 하거나 영화감상,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짜임새있게 추진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다. 선형학습도 금지된데다 겨울방학이 늦어지면서 중3 교실의 '시간 때우기' 식 운영은 한 달 정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녀들을 한달간 놀리는 교육당국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중3에게 학기말은 중요한 시점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고입·대입 등

진로에 대해 모색하고 고민하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내지 또 다른 진로 선택이라는 향후 레이스에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선 선행학습은 아니더라도 각 교과별 고교 커리큘럼, 수업의 진행방향이나 수준, 올바른 공부습관·방법 등 손조로운 스타트와 페이스 조절을 위한 지도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고교에 진학할 준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외부인사나 학부모, 졸업생 선배 초청 교양교육 및 직업·진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종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불우시설이나 소외계층 찾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펴도록 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고교 3년 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인격형성에도 중요한 시기인 중3 학기말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골목길 불법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주차가 골목길에 불법주차와 각종 주차 방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활도로인 골목길이 주차 차량으로 넘쳐나가는 하면 단독주택 앞길에는 자기 땅인 양 드림통·타이어·화분·철제구조물 등 온갖 불법주차 방치물로 가득하다.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끼리 말다툼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서를 찾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대부족해 벨리의 가치를 먼저 내걸었다고 해서 과실까지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도 크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얼마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이전 및 자동차벨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모두들 광주·전남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광주·전남을 2류, 3류가 아닌,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상상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곧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상상운동에 임하자.

가 일상화된 지 오래고, 집이나 상가 앞 도로를 마치 자기 땅인 양 쌓아놓는 적치물로 보행·운행을 방해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신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웃 간에 다툼으로 인해 경찰을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광주시와 구청은 각종 대책을 내놔지만 생색내기가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644개소의 경우 거리상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 외면 받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실패로 손을 놓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을 인위적으로 대거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구청은 불법주차와 방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골목길 불법주차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 선진국처럼 차량 구입시 차고지 확보를 전제로 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은편칼럼

광주·전남의 상생, 실천이 중요하다



최 영 태 전남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 상임대표

해방 후 한국 사회가 이룩한 정치·경제적 발전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광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지만 햇볕정책이라는 이정표가 있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 혹은 낙관적 기대와는 정반대의 영역이 있다. 지역 간 격차와 호남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그것이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화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수도권 지역, 특히 호남지역은 2류 지역화 되어가고 있다. 호남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정권교체와 민주정부의 수립에 매진해왔다. 다행히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역균형발전은 진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적 리더십 및 지역균형발전의 철학을 가진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선거에서 호남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친 호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지역 차별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호남 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호남인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 흐름은 광역경제권의 구축이다. 호남권 중에서 전북은 광주·전남과 역사적·정치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같은 생활권은 아니다. 반면 광주·전남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하나의 생활권이다. 오로지 행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광주·전남의 발전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음과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공동의 발전책을 도모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취임한 윤창환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선거 때부터 광주·전남의 협력을 유난히 강조했다. 두 분이 시·도의 행정을 맡

은 지 6개월째 접어들었고, 시·도가 논의한 협력방안 일부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다. 좀 더 큰 틀의 상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 초면 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광주는 민간공항을 계속 광주에 존치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군사공항만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발상으로는 큰 틀의 지역발전은 도모하기 어렵다. 무안공항은 개항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활성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받아들이고 군사공항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현재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생각이 불과하다.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생을 도모하고 2류, 3류 지역화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 광주는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보내고, 전남은 군사공항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지역에 자동차벨리를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구상 자체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먼저 지역민들이 기업과 정치권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생각해 본다. 광주는 자동차 벨리의 가치를 먼저 내걸었다고 해서 과실까지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도 크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얼마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이전 및 자동차벨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모두들 광주·전남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남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광주·전남을 2류, 3류가 아닌,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상상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이 곧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상상운동에 임하자.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100원 택시' 국비 지원 당연하다



고 두 gap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전남도에서는 내년부터 '100원 택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남도내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원으로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TV와 신문 등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00원 택시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통 복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100원 택시 제도는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들 정도로 진작부터 시행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을 실정이다. 게다가 도서와 산간 오지 등 교통 측면의 취약성 역시 매우 높아 이 100원 택시 제도의 도입은 더욱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의 도입에 앞서 행정 당국은 더욱 세심한 면들을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 제도는 전남 지역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차원의 정책이기에 앞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100원

으로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는 시혜적 발상이 아닌,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도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 그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상, 혹은 저가의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가 아닌,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기초에서의 행복 추구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는 앞서의 문제와 연관되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

른 복지비용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체에 정리하고, 일회성 행사와 같은 소모성 경비에 대한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이 제도의 명분은 더욱 공고해지게 될 것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100원 택시 정책은 단순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를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無 等 鼓

세상에 터무니없는 기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실패를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튜립 투기다.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튜립은 진귀한 꽃으로서, 귀부인들이 이브닝드레스를 입을 때 장식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1635년에는 튼튼한 튜립 구근 한 개로 좋은 마차와 말 서너 마리를 맞아꿀 수 있을 정도였다. 이재에 밝은 네덜란드인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튜립 투자를 시작했다. '헛된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튜립은 1636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네덜란드 정부는 '튜립 교역법'까지 공표했다. 이어 전 국민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튜립 투자를, 또는 투기에 뛰어들었다. 1637년 초엔 튜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희귀한 품종의 최상급 튜립 구근 한 개로 암스테르담 운하 근처의 호화 저택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운명의 날은 1637년 2월 4일 갑자기 찾아왔다. 튜립 가격이 이날 '아무런 이유없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

주일세 튜립은 양파 수준으로 값이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나서 "튜립 가격이 폭락할 이유가 없으니 구매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4월 27일 정부는 '튜립계약의 종결'을 선포했고 마침내 거품이 꺼졌다. 당시 거래되던 튜립은 식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변종 구근이었고,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없는 구근들은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도 결국엔 피앗이 지는 한 송이 꽃일 뿐. 모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기가 계속된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결에도 급작스럽게 추락하는 인사와들이 적지 않다. 높은 도덕성과 고매한 품격을 지닌 줄로만 생각되던 수많은 정치인과 관료, 기업인들이 두터운 화장 뒤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면서 급작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는 기대는 대부분 헛된 것이었지만, 추한 뒷모습은 언제나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튜립의 추락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